대형 산불, 사찰림이 위험하다

불교환경연대 '쟁점 토론회' 현장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방대한 영역의 산림이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천년 고찰 의성 고운사와 운람사 등 6곳의 사찰과 문화유산도 피해를 입은 가운데,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 산하 녹색불교연구소(소장 유정길)가 4월 11일 사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사찰림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논의된 쟁점과 전문가 제언을 소개한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


윤여창 서울대 명예교수


불교환경연대 산하 녹색불교연구소는 4월 11일 사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사찰림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계종 환경위원)는 활엽수를 베어내고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만 남기는 현재의 사찰림 관리 방식이 화재 피해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사진(왼쪽 · 오른쪽)은 송광사 사찰림의 모습. **사진 제공=홍석환**

여수령 기자 · 박수현 수습기자

이번 영남 지역 산불로 사찰과 사찰림이 산불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녹색불교연구소가 4월 11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형산불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기후위기 쟁점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 사찰림 관리의 문제점을 짚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가 산림 정책과 사찰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찰림 정책, 전면 재고해야"

이날 '숲과 산불, 사찰숲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활엽수 제거와 소나무 위주의 조림 정책, 화재 시 불길로 이어지는 임도 등 주요 쟁점을 다시 한번 짚었다.

홍 교수는 "산불에 가장 많은 대책을 마련하는 곳이 사찰이다. 그런데 고운사와 운람사가 전소되다시피 했다. 그렇다면 그간의 사찰 산불 전략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나무 위주로 조성되는 사찰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번 산불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의 96%가 소나무림이다. 문제는 소나무 밑의 활엽수를 전부 제거하는 사업이 매년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햇빛이 바닥까지 들어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해인사 홍제암, 숭림사, 신륵사 등의 사찰림 현황을 사진으로 제시했다. 그는 "불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인데, 오히려 사찰에서 자연의 흐름을 막는 조림 사업이 이뤄지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임도가 산불 피해를 키운다고도 주장했다. 홍 교수는 "그간 '숲가꾸기 사업'으로 설치된 임도를 타고 산불이 번져나갔다. 이번 산불 피해 현장은 임도가 필요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산림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사찰림 관리 방식을 전면 재수정하지 않는 한 이런 산불 사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찰림 관리권, 정부서 사찰로 이관"

주제발표를 맡은 윤여창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현재의 사찰림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에 동의하며 "사찰림의 관리권을 정부에서 사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건강한 숲이 산불에 잘 견딘다. 그런데 사찰림 대부분은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숲으로 가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예방을 위해 △건조기 입산 금지 △입산 신고 △주민산림보호계약제 도입을 제안하고 "사찰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사찰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숲을 지키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찰림 관리권 이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교수는 "1967년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요 사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국가가 국립공원 정책을 주관하면서 사찰의 자율권이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한 사찰 주지스님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는 "단위 사찰과 교구본사, 종단 차원에서 사찰림을 관리하는 조직이 부재하다. 조계종단 차원에서 사찰림 관리권 이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엽수-임도가 피해 키워" VS "임도는 숲의 혈관"
전문가들 "조계종, 사찰림 정책 논의 시작해야"

"침엽수-임도 논쟁 검토 필요"

침엽수 위주의 조림과 임도가 산불 피해를 키운다는 주장에 대한 다른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장영환 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사무국장은 "소나무가 산불에 취약한 것은 맞지만, 이번 산불 피해 사찰림을 분석해 본 결과 소나무가 식재된 면적은 예상보다 넓지 않았다. 소나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도 논란에 대해서는 "사찰림은 대개 외진 곳에 있어 산불 발생 시 진입과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친환경적·목적형 임도는 산불 초동 대응, 병충해 방제, 진화 후 재발화 점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숲의 혈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찰에서 문화재와 인접한 구역에는 최대한 나무를 심지 않고, 산림청에서는 '대형 산불 타워'를 설치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도 "산불에 취약한 사찰림 소나무숲을 혼효림 또는 활엽수림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소나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송이 채취 등 실질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 숲 생태 전환을 위한 방법과 적용 범위, 관리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윤호 백두대간숲연구소장은 "침엽수림의 조성 과정과 원인을 따지기보다 현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사찰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공론화 테이블 절실"

일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찰림 보호를 위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문가들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대형 산불을 통해 드러난 재난 대응 시스템과 산림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론화 테이블 마련이 절실하다"며 "조계종 차원에서 정부에 공론장 마련을 제안하고, 국회가 이를 수용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장은 "사찰림과 산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사찰은 산림청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사찰림을 보호하고 산불로부터 사찰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불교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찰림 정책에 대한 협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불교환경연대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 자격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 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상반기 7월, 하반기 12월 지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 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분한신고미필 및 결계 미등재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문의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9(2025)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덕 림